

송갑석 “호남 경선서 반전 계기 마련”

민주 전대 레이스 ‘이재명’ 독주로 흥행 ‘빨간불’ 당 대표 이어 최고위원 판세도 ‘친명’ 후보 우세 광주 광역·기초의원들 “비수도권 후보 지지 호소”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8·28 전당대회가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독주체제로 이어지면서 흥행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유일한 비수도권 출신 최고위원 후보인 송갑석 의원(광주 서갑)이 얻을 성적표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정가에서는 지난 해 4월 호남 단일후보로 최고위원 경선에 나섰던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탈락한 바 있어 이번에는 반드시 ‘민주당을 지켜온 호남’이라는 지역적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호남 출신 선출직 최고위원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가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으로 흐르면서 당대표 레이스에 이어 최고위원 판세도 친이재명(친명)계 후보가 앞서는 싱거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 권리당원 누적 득표를 상위 5인 가운데 고민정 후보를 제외한 4명(정청래 박찬대 장경태 서영교)은 모두 친이재명 성향이다.

그러나 대표도 이재명, 최고위원들도 모두 ‘친명’ 일색으로 구성될 경우 당내의 서로 다른 다양한 목소리가 제대로 수렴될 수 없는 비민주적 지도부로 전락할 우려도 큰 상황이다.

또한 지도부 구성원들이 모두 서울 등 수도권 출신 정치인들로 채워지면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은 물론 비수도권 당원이나 대의원의 요구는 당내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송갑석 후보는 지난 9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호남 정당을 벗어나 친선만고 끝에 지금의 전국 정당인 됐는데 수도권 출신으로 지도부가 구성되는 것은 민주당의 필승 전략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지방과 지방이 단단하게 연대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는 것이 승리하고 강한 민주당으로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 후보는 “2주 차 부산·울산·경남과 충청에서 비수도권 이야기로 설득력을 얻고 3주 차 호남, 4주 차 수도권 경

선에서 전략을 새롭게 추가하겠다”며 “특히 호남 당원들이 많은 공감을 해준다면 반전의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호남의 전국대의원·권리당원 수는 ▲광주 9만2천888명 ▲전남 17만2천265명 ▲전북 15만8천476명으로 전체(19만6천217명)의 35.4%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서울 21만508명 ▲경기 23만7천306명)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것으로, 실제 호남에서 얼마나 많은 지지를 얻느냐가 사실상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민주당 광주시 광역·기초의원 전원’ 이름으로 된 공동성명서가 발표된 것도 주목된다.

광주시 광역·기초의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광주와 호남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민주당의 심장이자, 승리를 향한 민주당의 조타수였다”면서 “그러나 광주와

호남의 민심은 지난 두 차례의 전당대회에서 철저히 외면당했다. 선거철만 되면 경쟁하듯 호남 텃밭을 내세우면서, 정작 중앙정치에서 호남을 소외한 결과는 두 번의 커다란 패배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차갑게 식어버린 민주당의 심장 호남을 다시 뛰게 하려면 호남의 민심을 대변할 호남 대표 후보가 당 지도부에 반드시 입성해야 한다”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완성을 위해서도 유일한 비수도권 후보가 당 지도부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의 한 관계자는 “최고위원 선거는 1인 2표가 행사되는 만큼 적어도 3-5위권 판세는 얼마든지 요동칠 수 있다”면서 “특히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28일 치러지는 대의원 투표(투표 반영 비율 30%)를 앞두고 비이재명계의 전략투표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진수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첫 사과 “국가 무한책임”

집중호우 피해 점검·침수대책 회의도 연달아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이번 집중호우 사태 이를 만에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우피해 상황 점검회의’와 ‘하천홍수·도심침수 관련 대책회의’를 연달아 주재했다.

민방위부 차림의 윤 대통령은 오전 9시 시작한 피해 점검 회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 안전에 대해 국가는 무한 책임을 진다. 이 점을 모든 공직자는 꼭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곧이어 오전 10시부터 침

수 대책 회의를 열었다.

전날 현장을 찾았던 반지하 거주 일가족의 침수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다시 한번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들에게 정부를 대표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사과 표명에 대해 “피해가 크고 국민이 불편을 겪는 부분도 많으니 그에 대해 미안하다는 마음과 함께 적극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전한 것”이라며 “오늘 피해 점검 회의를 추가로 주재하게 된 것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기자

전해철 “‘기소시 직무정지’ 당헌개정 안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10일 당내에서 논의 중인 ‘기소시 당직 정지’ 당헌 규정 개정과 관련해 “전당대회 과정에서 개정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목포 출신인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당헌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의 당 혁신 노력을 공개적으로 후퇴시키는 일이며 오히려 민주당의 신뢰 회복을 위해 더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당 규정에 대해 “2015년 문재인 당 대표 시절 의결된 당 혁신안”이라며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부정부패와 단호하게 결별하겠다는 다짐으로 혁신안을 마련

했다. 이는 국민께 드린 약속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의 부당한 정치개입 수사가 현실화했을 때 기소만으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당헌 개정 논의는 실제로 그런 문제가 불거진 후 당 차원의 공론화 과정과 충분한 의견 수렴에 의해 검토되고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제도적 평가가 확실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후보와 연관된 당헌 개정이 쟁점이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김진수기자

여의도 클릭

서삼석 ‘양식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0일 “귀어인 어촌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과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양식업 창업을 원하는 청년이나 귀어인 등이 단기간에 기존 어촌계나 지구별 수협 등 어촌단체와 유대를 형성해 공동체 면허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개인 소유의 양식업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이 소요돼 실질적으로 어촌사회에 진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청년·귀어인 등의 개인이나 단체에 임대대가 가능하도록 해 양식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에 임대할 수 있는 양식업권 범위를 확대하는 등 청년·귀어인 등의 어촌사회 정착을

위한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방인구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소득 증대와 생활수준 향상 등 섬과 농어촌의 거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부처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며 “제도 개선과 입법 마련으로 섬 주민과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이 함께 발의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무인섬 개발 시, 상하수도 등 필수시설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무인섬으로 간주되는 거주 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축소해 유인섬 임에도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방지한 것이 골자다. /김진수기자

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법적 대응’ 전면전

이준석 “절대반지는 먼 사람들, 폭우 아랑곳 않고 비대위 강행”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0일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비대위 전환과 관련,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전날 비대위 전환으로 대표직을 박탈하게 된 이 대표가 이에 반발, 법적 대응에 들어가며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전면전을 선언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 전제로 접수했다”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가처분 신청 후 “절대 반

지’에 눈이 먼 사람들이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많고, (국민의) 심려가 큰 상황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비대위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사안의 급박성 때문에 가처분(신청)을 내야 했다. 수해에 마음 아플 국민들을 생각해 조용히 전자 소송으로 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성상남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중앙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지난달 8일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지방을 돌며 당원과의 직접 만남을 진행하면서 경찰 수사 등에 대비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배현진·조수진·윤영석·정미경 최고위원 등의 출사퇴진으로 지도부가 붕괴 수준에 이르면서 비대위 전환 과정을 밟게 됐다. 이어 전날엔 전국위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며 ‘주호영 비대위’를 공식 출범시켰다.

당헌상 비대위로 전환되면 이 대표를 비롯한 전임 지도부는 자동 해임된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절차적 정당성 등을 문제 삼아 비대위 전환에 대한 효

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법적 판단을 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이미 사퇴를 선언한 최고위원이 최고위원결에 참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반발해왔다.

집권여당의 수장이었던 이 대표가 소속 정당의 결정에 공개 반발,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국민의힘 내홍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 가까운 오세훈 시장, 정미경 전 최고위원 등을 비롯해 당내 중진 의원들도 이런 혼란을 우려해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만류한 바 있다. /연합뉴스

그린알로에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